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양평섭 동북아경제실 북경사무소 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86-10-8497-2870)
- 박민숙 동북아경제실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86-10-8497-2870)

차 례 ●●●

1. <13.5 계획>의 목표와 기본 이념
2.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0.26~29)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가 통과되었으며, 13.5 기간(2016~2020년)의 정책 목표와 5대 발전 이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등이 제시됨.
- 13.5 기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 건설 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임을 강조하고, <13.5 계획>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
- 한편 13.5 기간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혁신(創新), 균형(協調),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
- ▶ [<13.5 계획>의 분야별 핵심 사항] 13.5 기간에는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 향상에 역점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발표 없이 중고속 성장 유지 방침 발표(시진핑 주석은 13.5 기간 6.5% 이상의 성장률 유지 필요성 언급)
- [산업전략] 인터넷 강국 건설(인터넷+행동계획), 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추구
- [지역발전전략] '4+3'의 지역발전전략(동부 선도·중부굴기·서부대개발·동북진흥+일대일로·장강경제벨트), 신형도시화(도시군 발전과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 [경제개혁]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재정 및 세제 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 시장화), 도시화 및 농촌 개혁(호구·부동산·토지제도 개혁),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시행 등을 제시
- [대외개방전략]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 항목 자유화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RCEP, FTAAP),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 등 추구
- ▶ [평가 및 시사점]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 변화, 일대일로 중심의 중국 지역협력 구도 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한 새로운 대중국 협력전략 모색 필요
- 아울러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도모, RCEP과 FTAAP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드라이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도 필요

1. <13.5 계획>의 목표와 기본 이념

가. 18기 5중전회 개최, <13.5 계획> 건의 통과

- 2015년 10월 26~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제18기 5중전회)를 개최하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이하 <공보>라 함)>¹⁾를 발표함.
- 18기 5중전회에서는 <중공 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이라 함)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라 함)>²⁾가 통과됨.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5년간 7회 개최되며, 1~2차 회의는 당 및 중앙부서의 주요 인사 선출, 3차 회의는 국가발전 및 경제건설 방향, 4차 회의는 공산당의 주요 의제, 5차 회의는 5개년 계획을 각각 논의

표 1.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별 주요 의제 및 내용

구분	회의 일시	주요 의제 및 내용
1중전회	2012. 11. 15	·당 조직 구성: 총서기, 상무위원 및 정치국위원 등 당 지도부 구성
2중전회	2013. 2. 26~ 28	·정부기관 구성: 인사개편, 장관급 행정부 구성 ·국무원 개혁 및 정부기능 개편
3중전회	2013. 11. 9~ 12	·경제·사회 개혁 방향 결정 ·<중공 중앙의 전면 심화 개혁에 관한 문제 결정>
4중전회	2014. 10. 20~ 23	·의법치국 추진 결정 ·<중공중앙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
5중전회	2015. 10. 26~ 29	·<13.5 계획(2016~20년)> 심의 ·<13.5 계획에 관한 건의>
6중전회	2016년 10월(예정)	·기타 이슈 (사회·문화 개혁방안 등)
7중전회	2017년 10월(예정)	·5년 평가, 차기 당 대회 준비

자료: 「十八届五中全会于10月26日至29日在北京进行」(2015년10월), 『新华网』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나. <13.5 계획>의 지도 사상과 6대 원칙

- <건의>에서는 13.5 기간(2016~20년)을 ‘두 개 100년’ 목표³⁾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라고 강조하고, <13.5 계획>은 샤오강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함.

1)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2015年10月29日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通过).

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3)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장기목표로서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따통(大同) 사회’를 실현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건의〉에서는 〈13.5 계획〉 기간의 국가 발전 지도사상의 하나로 4개 전면 견지를 제시하고,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6대 원칙을 제시함.

표 2. 4개 전면과 6대 원칙

구 분	주요 전략
4개 全面	① 전면 샤오캉 사회 ② 전면 심화 개혁 ③ 전면 의법치국 ④ 전면 당 지도
6대 원칙	-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6대 원칙 ① 인민 주체지위 견지 ② 과학발전 견지 ③ 심화개혁 견지 ④ 의법치국 견지 ⑤ 국내와 국제 양 국면의 통합 견지 ⑥ 당의 영도 견지

자료: 〈건의〉 정리.

다. 13.5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기본이념

- [5대 목표] 〈건의〉에서는 13.5 기간 전면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해 실현해 나아가야 할 5개 목표로 △ 중고속 성장 유지 △ 민생 향상 △ 국민 소양과 사회문명 함양 △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 등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이 2015년 5월 저장(浙江)성 시찰 시 처음으로 <13.5 계획>의 전체 틀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10대 임무⁴⁾를 제시한 바 있음.

표 3.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한 5대 목표

목표	주요 내용
① 중고속 성장 유지	△ 균형·포용·지속가능 발전을 기초로 2020년 GDP와 도시·농촌 주민소득 2010년의 두 배 달성 △ 주요경제지표의 균형, 투자와 기업효율 제고, 공업화·정보화 융합발전, 중첨단 산업 수준 도달, 선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신산업·신업태 부단 발전, 서비스업 비중 제고, 소비의 경제성장 공헌 강화 ⁵⁾ △ 호구인구 도시화율 제고 △ 농업현대화의 현저한 진전 △ 혁신형 국가와 인재강국 행렬 진입
② 민생 수준 제고	△ 공공서비스(취업, 교육, 문화, 사회보장, 의료, 주택) 완비 △ 교육 현대화, 노동연령인구의 교육 연한 증대 △ 소득격차 축소, 중등 소득인구 비중 상승 △ 표준 이하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곤 실현, 빈곤 현(縣) 전부 해소, 구역성 빈곤 해결
③ 국민소양과 사회문명 제고	△ ‘중국의 꿈(中國夢)’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함양, 애국주의·집체주의·사회주의 사상 함양, 상호 부조·상호 신뢰 의식 함양, 도덕·과학문화·건강한 소양 제고, 법치 의식 제고 △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기본 건설, 문화산업의 국민지주산업화 △ 중화 문화 영향력 지속 확대

4) 중고속 성장, 포용적 성장(분배), 국민소득 향상, 첨단산업 발전, 소비 위주로의 성장 전환, 도시화율 확대, 농업 현대화, 민생 개선, 빈민구제, 생태환경 보호 등.

표 3. 계획

목표	주요 내용
④ 생태환경 총체적 개선	△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녹색·저탄소 수준 제고 △ 에너지 자원 개발·이용효율 대폭 제고, 에너지 및 자원 소모·건설용지·탄소배출량 총량 효율적 통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 주체공농구 분포와 생태안전 보호망 기본 형성
⑤ 제도 성숙·정형화	△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 능력, 각 영역의 기본 제도 및 시스템 정비 △ 인민민주 완비, 법치정부, 사법 공신력 제고 △ 철저한 인권 보장, 실질적 재산권 보호 △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기본 형성 △ 중국 특유의 현대 군체제 완비 △ 당 건설 제도화 수준의 현저한 제고

자료: <건의> 정리.

■ [5대 발전이념과 과제] <건의>에서는 <13.5 계획> 기간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발전이념으로 혁신(創新), 균형(協調), 녹색,⁵⁾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을 제시함.

- 아울러 <건의>에서는 혁신·균형·녹색·개방·공동향유 발전, 당의 영도 등 6개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구체적 내용은 부표 참고).

표 4. 전면 '샤오캉 사회'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발전이념

발전 이념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정책 과제
① 혁신(創新) 발전	△ 혁신(創新)이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임. △ 이론·제도·과학기술·문화 혁신 추진	△ 발전의 신동력 육성 △ 발전 신공간 개척 △ 혁신 추동전략의 심화 실시 △ 농업현대화의 전력 추진 △ 신산업체제 구축 △ 발전 신체제 구축 △ 혁신과 거시 통제방식 완비
② 균형(協調) 발전	△ 균형(協調)은 건강한 발전의 내재적 요구사항 △ 도시·농촌 균형, 경제·사회 균형, 신형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 동시 발전, 소프트 파워 확대	△ 구역 균형 발전 △ 도시·농촌 균형 발전 △ 물질·정신문명 균형 발전 △ 경제·국방 융합 발전
③ 녹색(綠色) 발전	△ 녹색은 지속적 발전의 필수조건 △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자원절약형·친환경건설, 사람·자연의 조화 발전,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건설, 글로벌 생태안전 공헌	△ 사람·자연의 화해공생 촉진 △ 주체공농구 건설 가속화 △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5) 2011~14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4.8%로 투자에 비해 7.8%p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 1월~9월 중에는 60%로 높아짐.

6) 국무원이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2015. 5. 5)>을 발표하여 녹색발전 추진, 녹색생활 유도, 녹색도시화 추진, 녹색산업 발전, 생활방식의 녹색화 추진을 제기함.

표 4. 계속

발전 이념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정책 과제
④ 개방 (開放) 발전	△ 개방은 국가 번영을 위한 도로 △ 호혜공영 개방, 내수·외수 협조, 무역 균형, 외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동시 중시, 자본과 기술 유입 병행, 다층적 개방형 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및 발언권 확대, 이익공동체 구축	△ 대외개방전략 구도 완비 △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대륙과 HTM 협력 심화 △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 국제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⑤ 공동향유 (共享) 발전	△ 공동향유(共享)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 △ 국민을 위한 발전·국민에 의한 발전·발전성과의 향유 견지, 발전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하는 공동부유 지향	△ 빈곤탈피 공정 실시 △ 교육의 질 제고 △ 취업·창업 촉진 △ 소득격차 축소 △ 공평·지속가능 사회보장제도 건립 △ 건강중국(健康中國) 건설 △ 인구 균형발전 촉진

자료: 〈건의〉 정리.

표 5.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추진 정책

분야	정책 과제	주요 추진 정책
혁신발전 (7개)	발전의 신동력 육성	·대중 창업·만중 창신, 소비가 성장의 기초, 투·융자체제 개혁, PPP 확대, 비교우위 수입과 비교우위 수출전략 실시
	발전 신공간 개척	·중형 경제축대 구축, 신형도시화(3대 도시군 등), 중점경제구, 도농 일체화 ·신흥산업, 창업 지원, 인터넷 강국 전략, 인프라 건설, ‘인터넷+’행동계획, 국가 빅데이터 전략, 해양강국 건설
	혁신 추동전략의 심화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 실시, 국가실험실, 국가 대(大)과학계획과 대(大)과 학 공정
	농업현대화 추진	·농촌 토지제도 개혁, 농촌금융 개혁, 엄격한 농지보호
	신산업체제 구축	·제조 강국 건설과 중국 제조 2025, 공업 기초 강화 공정, 전략적 신흥산 업 발전, 스마트제조 공정, 10대 산업 육성, 서비스업 육성
	발전 신체제 구축	·재산권·투·융자체제·분배제도 개혁, 행정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민영기업 진입 영역 확대, 정부의 경영간섭 제한, 재정·세제 개혁, 금융 개혁
	거시 통제방식 혁신	·정부 가격 관여 축소(전력,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수, 통신)
균형발전 (4개)	구역 균형	·서부대개발, 노후공업기지 진흥, 중부 굴기, 연해 선도, 성장극(極)육성,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도시·농촌 균형 발전	·현(縣)경제 발전, 사람 핵심의 도시화, 부동산 개혁, 엄격한 농지관리
	물질·정신문명 균형 발전	·문화강국 건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 전통매체·신매체 융합 발전, 문 화 해외 진출
	경제·국방 융합 발전	·2020년 국방개혁 완성, 군민 융합발전 전략
녹색발전 (6개)	사람·자연의 공생 촉진	·녹색·저탄소·순환 발전 산업체제, 녹색금융, 녹색발전기금
	주체공능구 건설 가속화	·주체공능구 계획, 농업산물 주산구 중점생태공능구 목록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현대 에너지 체계, Near-0탄 배출 시범 항목, 순환발전 선도계획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절약 우선, 에너지·용수·오염배출·탄소배출권 분배제도, 엄격한 수질 관리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엄격한 환경보호, 대가·물·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실행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독·감찰·집행 수직관리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천연림 보호제도, 물 생태보호 강화, 사막화 관리, 블루해양

표 5. 계속

분야	정책 과제	주요 추진 정책
개방전략 (6개)	대외개방전략 구도 완비	·선진 제조기자·경제구 육성, 변경·초국경 경제협력구 발전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통관일체화, 자유무역 실험구 확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시행, 서비스 개방, 위안화 자유태환, SDR 편입, 점진적 자본시장 개방
	일대일로 건설 추진	·상호 공영, 설비 및 장비 국제협력, 동서 쌍방향 개방
	대륙과 HTM 협력 심화	·범주강삼각주 경제협력, 해협 양안경제구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다자무역협상 추진, IMF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RCEP 및 FTAAP 추진
	국제적 책임과 의무 부담	·기후변화, 2030지속발전 Agenda, 인터넷 안전, 반부패
공향발전 (8개)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	·의무교육 강화 등
	빈곤탈피 프로젝트 실시	·농촌 빈민 및 빈곤 縣 완전 해소
	교육의 질 제고	·의무교육 균형 발전, 빈곤계층 교육 지원
	취업·창업 촉진	·취업우선 전략, 적극적 취업정책, 창업 지원
	소득격차 축소	·주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 동시 실현,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평한 사회보장제도	·직공양로보험, 대병 보험, 국유자본의 보험기금 충당
	건강중국(健康中國) 건설	·의료, 위생, 식품안전전략
	인구 균형발전 촉진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실시

자료: 〈건의〉 정리.

2.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가. 13.5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 중고속 성장 유지, 최저선은 6.5%

■ 〈건의〉에서는 〈13.5 계획〉 기간 동안의 목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고, ‘중고속 성장 유지’ 목표만 제시함.

- 13.5 기간에는 2020년 GDP와 1인당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전면적 샤오강 사회 실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함.
- 〈건의〉에서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중고속 성장’ 유지, ‘안정속의 개혁’을 기본 기조로 하여 ‘경제발전의 뉴노멀(新常态) 유도’,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비교적 빠른 발전 유지’ 등을 강조함.

■ 〈13.5 계획〉에서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면적 ‘샤오강 사회’ 목표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감안한 ‘중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전면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 6.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피함.
 - 시진핑 총서기는 〈건의〉에 대한 설명에서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리커창 총리는 2015년 10월 23일 중앙당교 강연에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6.5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보다 낮을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사 쉬린(徐林) 국장은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5년간 6.56% 이상만 성장하면 2020년까지 1인당 GDP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13.5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6.5% 내외로 예측함.
- 인구 보너스 소멸, 환경 제약, 공급과잉 구조조정 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혁신, 신성장동력 산업, 일대일로, 인구정책 전환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연구기관은 <13.5 계획>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2~6.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⁷⁾ 중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도 6.1~7.0%⁸⁾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표 6. 과거 5개년 계획 기간 성장률 목표와 실적

기간	목표성장률	실적	기본 방향
10.5	7.0%	9.6%	비교적 빠른 성장
11.5	7.5%	11.2%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12.5	7.0%	7.8%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13.5	-	6.5% 이상	중고속 성장 유지, 구간 조정하의 거시경제 조정

주: 12.5기간 실적은 2015년 7% 성장을 전제로 작성함.

자료: 각 5개년 계획 및 CEIC를 기초로 저자 정리.

나. 산업발전 전략

- <건의>에서는 13.5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새로운 산업구조 구축, 녹색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과 퇴출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① 신성장동력 육성

- <건의>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신형산업 발전, 인터넷경제(‘인터넷+’ 행동계획 등) 육성을 제시함.

7) 13.5 기간 잠재성장률 추정: 사면대학교 거시경제연구소 6.8%, 국가정보센터 6.5%, 사회과학원 6.2%, IMF의 13.5 기간 연평균 성장률 전망 6.2%.

8) <財政國家週刊>이 중국 내 100인 경제학자 및 관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3.5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5.15%가 5.1~6.0%로 전망, 64.56%가 6.1~7.0%로 전망, 7.1~8.0%가 7.1~8.0%를 전망함. 『“十三五”经济增长与转型:百名经济学家大调查』, 『财经国家周刊』(2015. 11. 2), <http://www.ennweekly.com/2015/1102/16549.html>.

■ [신흥산업 발전] 신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신형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창업·산업투자 발전, 창업반·신삼판 개혁 등을 요구함.

- [신흥산업 발전] 신흥산업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신에너지 등을 제시함.

■ 인터넷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여 ‘인터넷 강국’을 건설하고, ‘인터넷+’ 행동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기함.

- [인터넷 강국] 고속·안전·광대역 차세대 정보 기초시설 건설을 통해 인터넷 강국을 건설함.

- [인터넷경제 발전] 인터넷+행동계획⁹⁾ 국가 빅데이터 전략, 사물인터넷(IOT) 기술 응용, 차세대 인터넷 보급을 통해 인터넷 경제를 발전시킴.

■ 대중 창업·풀뿌리 혁신, 신기술·신산업·신업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함.

② 신산업체제 구축

■ <건의>에서는 새로운 산업체제의 구축 방향으로 ‘중국제조 2025’ 실시, 전략적(신흥) 산업 육성, 스마트 제조, 현대 서비스업 육성, 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함.

-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그 첫째 단계의 목표¹⁰⁾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실시할 것임을 밝힘.

○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육성 10대 산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첨단 NC선반 및 로봇, 우주항공설비, 해양플랜트 및 고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신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전략성 신흥산업] <건의>에서는 산업 촉진정책과 경쟁촉진 기능, 국가 산업투자의 자금유도 기능을 발휘하여 일련의 전략성 산업을 육성할 것을 건의함.

○ 중국정부는 2012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정보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설정하고, 2020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함.¹¹⁾

9)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5. 7. 4 발표)에서 인터넷+ 창업·혁신, 협동제조, 현대농업, 스마트 에너지, 특혜금융(普惠金融), 인민이익 서비스(益民服务), 고효율 물류, 전자상거래, 편리하고 빠른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 등 11가지 행동 계획을 발표함.

10) 중국은 향후 30년간 산업고도화 3단계 전략 추진을 통해 제조 강국에 진입함. 제1단계(2015~25년)에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제고하고, 제2단계(2026~35년)에는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 우위산업을 확보하고, 제3단계(2036~45년)에는 혁신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선도함. 중국 국무원, 「중국제조 2025에 관한 통지(《中国制造2025》的通知)」 발표(2015. 8. 6).

-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 공정¹²⁾을 통한 새로운 제조 시스템을 구축함.

■ [서비스 산업 육성] <건의>에서는 서비스업 비중 제고¹³⁾와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의 생산형 서비스업 전환, 관광업 육성 등을 서비스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함.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독점성 공공서비스업(전력,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경쟁성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 [설비 과잉산업의 구조조정] 시장 메커니즘과 경제적 수단을 통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갈 것임.

③ 저탄소·순환산업 육성

■ [저탄소·순환발전 추동] 비화석 에너지 비중 제고, 저탄소 운송 및 건설, 탄소배출권 통제 등을 통한 저탄소·순환발전 추진

- [비화석 에너지 비중 제고]¹⁴⁾ 신에너지(풍력,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수력 및 지열 에너지, 원자력 등) 발전, 스마트 그리드 건설, 천연가스·석탄가스·세일가스 적극 개발과 개발권의 점진적 개방 추진 등을 제시함.

- [저탄소·운송·발전] 교통운송의 저탄소 발전 추진, 궤도교통 건설 강화, 자전거 등 녹색 행동 장려, 전기차의 산업화 수준 제고 등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

- [탄소배출권 통제 강화] 에너지 고소비 업종 사용 통제 강화, 중점 업종(전력, 철강, 전자재, 화공 등)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통제, 탄소배출 최고 목표 출현 실현, Near-0탄 탄소 배출구 시범 프로젝트 실시 등 제시

■ (환경관리 강화) 대기·물·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독·감찰·집행의 수직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성 정부가 환경에 대해 직접 감독·관리

11) 「국무원 “12.5” 국가전략성 신흥산업 발전 계획 통지(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2012. 7. 9 발표).

12) 공업신식화부, 46개 스마트제조 시점 및 시범 전문 항목 발표(2015. 7. 2).

13) 2014년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1%, 2015년 1~9월에는 51.5%에 달함. 2007년 제정된 <서비스업의 고속 발전에 관한 의견>에서는 2020년 서비스업 비중 달성 목표를 50%로 설정한 바 있음.

14)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 (2014. 11 발표)>에서는 2020년 비화석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15%(2014년 11.2% 점유)로 높이고, 석탄 생산량을 42억 톤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비중을 62%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음. 동시에 현재 <에너지 안전발전 전략>과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전략(2015~2030)> 제정을 추진 중임.

표 7. 13.5 기간 산업발전 전략

분야	과제	주요 추진 정책
발전 신공간 개척	신흥산업 발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신에너지 등 ·엔젤투자·창업·산업투자 발전, 창업반·신삼판 개혁
	인터넷 경제	·인터넷 강국 전략 실시, 차세대 정보 기초시설 건설 ·인터넷+행동계획, IOT, 국가 빅데이터 전략, 차세대 인터넷 보급
	해양경제 공간 개척	·해양경제 강화, 해양강국 건설
신산업체 계 구축	중국제조 2025	·제조 강국 건설과 중국제조 2025 실시 ·제조업의 정보기술 활용, 생산방식의 소프트화·정밀화
	공업 기초 강화 공정	·품질·브랜드, 표준기술 개조, 기술·제조장비·에너지 효율 제고
	전략성 신흥산업	·일련의 전략성 산업 육성
	스마트제조	·스마트 제조공정을 통한 새로운 제조 체계 구축 ·10대 산업 육성
녹색발전	녹색생산·녹색금융	·녹색·청결 생산, 전통 제조업 녹색화, 녹색금융·녹색발전기금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청결저탄소·안전고효율 현대 에너지체계 구축 ·비화석 에너지 비중(풍력·태양에너지·바이오·수력·지열·원자력) 제고 ·스마트 그리드 건설, 천연가스·석탄가스·세일가스 개발 ·저탄소 운송, 신에너지 자동차 확대 계획 ·탄소배출권 통제 강화, 순환발전 선도계획 실시, 순환 소비
	자원절약·효율 이용	·약속성 지표관리 강화, 에너지절약 행동계획 실시, 수자원 및 토지관리 강화, 경지 윤작휴작제도 시험, 계약 자원관리 및 계약 절수관리, 근검절약의 사회풍토 조성
	환경관리 강화	·엄격한 환경보호제도 실행, 대기·물·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실행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독·감찰·집행 수직관리
	생태안전 보호벽	·물 생태보호, 사막화 관리 강화, 블루해양
서비스 산업 발전	현대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독점성 공공 서비스업(전력,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등) 개방, 관광업 육성
	문화산업체계 구축	·문화기업과 창의문화산업 발전, 문화소비 유도
전통산업 구조조정	설비 공급과잉 해소	·시장 메커니즘과 의법 수단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 ·기업퇴출 메커니즘 완비

자료: 〈건의〉 정리.

다. 지역발전전략: 4+3 지역발전 전략과 신형 도시화

① 지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

■ 〈건의〉에서는 13.5 기간 현재의 ‘4대 판쾌(四大板块)+ 3개 지지대(三个支撑带)’ 전략¹⁵⁾을 기초로 지역간 협력발전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4대 판쾌]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의 기반 아래 서부대개발 전략, 중부굴기, 동북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동부의
술선 발전 등 기존의 4대 판쾌 전략 이외에 최근 자원제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3개 지지대]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전략 추진

15)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4대 판쾌(四大板块)와 3개 지지대(三个支撑带) 전략을 제기함.

■ [경제축벨트 전략 추진]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경제대(economic belt)’에서 ‘경제축벨트(軸帶, economic axial belt)’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포함.

- [중형 경제축벨트 육성] <건의>에서는 구역 발전 총체 전략을 기초로 하고, ‘일대일로’ 건설·징진지 협동발전·창장경제벨트 건설을 통해 연해·연강·연선¹⁶⁾ 위주의 중형 경제축벨트(軸帶)를 형성함.

■ [양대 성장극(極) 육성] 지역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성장극 전략으로 징진지 협동발전과 창장경제벨트 건설전략을 추진함.

- [징진지 협동발전] 도시공간 분포·산업구조 고도화, 점진적으로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 해소, 교통일체화, 인구 과밀지구의 특화개발 방식 모색¹⁷⁾

- [창장경제벨트] 창장유역 생태환경 개선, 종합적인 입체 교통화랑 건설, 산업 분포 고도화 및 분업협력 유도¹⁸⁾

② 도시화 전략 : 도시군-중심도시 구도와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 추진

■ [도시군 및 지역분포 전략] 도시군 분포에 있어서는 도시군-중심 도시로 연결되는 도시화 전략을 추진하고, 도시간 연계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도시군] 도시군의 방사 선도작용을 발휘하여 징진지·장삼각·주삼각 등 3개 대도시군과 동북지구·중원지구·창장중류·성위(성도-중경) 지구·관중평원 등 5대 도시군을 형성함.

- [중심 도시] 일련의 중심 도시를 발전시켜 구역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인프라 연결을 강화함.

■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건의>에서는 전면 ‘샤오캉 사회 실현’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호구인구 기준 도시화율 제고를 제시하고,¹⁹⁾ 동시에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以人为核心)’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

- 호구인구의 도시화를 위해 호적제도 개혁, ‘거주증제도’ 시행, 부동산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에 이주한 농민공의

16) 3연(三沿)의 경제주축대로는 연해경제주축대로 동부 연해(沿海) 경제발달지구, 연강(沿江) 경제 주축대로서 창장경제벨트, 연선(沿線) 경제주축대는 교통 간선인 베이징-상하이(京沪线), 베이징-광조우(京广线), 련위강-란조우-신장(陇海-兰新线), 신유라시아대륙교에 연결한 경제대임.

17) 「징진지 지역협동발전강요(京津冀协同发展纲要)」(2015. 8. 24 발표)에서 베이징시는 정치 중심·문화 중심·국제교류 중심·과학기술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고, 텐진시는 선진제조 및 R&D 기지·북방국제항운 핵심구·금융혁신운영 시범구·개혁개방 선행구로 육성하며, 허베이성은 전국 현대 비즈니스 및 물류 중요 기지·산업 업그레이드 시험구·신형도시화 및 도농 통합 시범구·징진지 생태환경 지지구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18)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2014. 9. 발표)에서 황금수로 기능 강화, 종합교통망 구축 등 창장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주요 방향을 제시함. 「창장경제벨트 종합입체교통화랑 계획(2014-2020년) (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规划(2014-2020年))」(2014. 9 발표)에서 2020년까지의 수로, 철도, 도로, 항공 등의 교통망 건설 목표치를 제시함.

19) 2014년 말 현재 중국의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화율은 54.77%이나, 호적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화율은 37%에 불과하며, 2020년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60%로,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45%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CCTV, 2015. 10. 29. 보도).

주거·교육·사회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동시에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토지청부권·택지사용권·집체수의 분배권 보호 및 유상양도를 보장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농민의 도시 이전을 지원함.

■ [3化 도시화 및 도시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에 있어 도시화의 새로운 추진 방향으로 녹색도시·스마트도시·산림(山林)도시 건설을 제시

- 도시 지역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지하관 망 개조사업, 도시 공공교통시설, 홍수방지 시설 건설에 역점을 둠.

③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발전

■ [도시와 농촌의 협조발전] 특색 있는 현(縣)경제의 발전 및 농촌 소도시 건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함.

표 8. 13.5 기간 지역발전 전략

분야	발전전략	주요 지역발전 방향
지역총체 발전전략	지역 발전 공간	·[중형 경제축대 형성]연해·연강·연선 위주의 중형 경제축벨트(軸帶)를 형성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 경제벨트 건설) ·일부 중점경제구 육성
	구역협조 발전: 4대 판패 + 곤란지역 지원	·동부 솔선 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및 동북 등 노공업기지 진흥 ·자원고갈·산업쇠퇴·생태악화에 따른 곤란 지역 지원 강화 ·혁명노구·민족지구·변경지구·빈곤지구 발전
	성장극 육성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건설
도시화 전략	도시군-중심 도시	·3대 대도시군(징진지·장삼각·주삼각), 5대 도시군(동북·중원·창장중류·성위(성도-중경) 지구·관중평원) ·일련의 중심 도시 발전 및 중심 도시간 기초시설 연결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	·호구제도 개혁, 거주증제도 시행, 부동산제도 개혁 ·도시이전 농민의 토지청부권·택지사용권·집체수의 분배권 보호
	3化 도시화	·녹색도시·스마트도시·산림(山林)도시 건설
	도시인프라 건설	·도시 공공교통, 홍수 방지시설, 도시 지하관 망 개조 공정 실시
도시·농촌 일체화	특색 縣경제 발전	·특색 있는 현(縣)경제 발전, 중소도시와 특색 있는 농촌도시(小城鎮) 육성
	공공자원 균형 배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자료: 〈건의〉 정리.

라. 경제개혁 추진 방향: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 개혁, 금융개혁 중점

■ [경제체제 개혁 방향] 〈건의〉에서는 시장 환경, 재산권 제도, 투융자 체제, 분배제도, 인재 육성 및 유치 메커니즘 구축 등 혁신형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건의〉에서는 중점 개혁과제로 △ 국유기업 개혁 △ 재정·세제 개혁 △ 금융 개혁 △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정부기능 전환 △ 시장체제 개혁 △ 국유자산관리제도 개혁 △ 농업 현대화·도시화·대외개방 관련 개혁 등을 제시함.

■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 개혁의 분류 추진, 현대기업제도 완비,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등을 국유기업 개혁 방향으로 제기함.²⁰⁾

■ [재정·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 세수분배 조정, 예산제도 개혁, 지방정부의 기재 및 용자체제 건립, 혁신상품과 녹색상품 우선 구매 및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함.²¹⁾

■ [금융 개혁] 금리 시장화²²⁾와 환율 시장화 개혁, 인민폐의 자유태환 실시, 다층적 자본시장 육성, 정책성 금융기구 및 개발성 금융 기능 활성화, 특혜 금융 및 인터넷 금융 발전 등의 개혁 과제를 제시함.²³⁾

표 9. 13.5 기간 경제개혁 추진 방향

분야		주요 추진 정책
국유자산 관리	비공유제 발전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비공유경제의 발전 장려
	국유자산 관리체제	·국유자산 관리체제 완비, 국유자본 유동 메커니즘, 국가안전·국민경제의 핵심 분야에 집중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 개혁의 분류 추진, 현대기업제도 완비 ·민영기업 진입영역 확대,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재정·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 세수분배 조정, 예산제도 개혁, 지방정부의 기재 및 용자체제 건립, 혁신상품과 녹색상품 우선 구매의 정부조달
금융 개혁		·금융기구 개혁,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입 확대, 특혜금융(普惠金融), 인터넷 금융, 녹색금융 및 발전기금, 직접금융 육성 ·환율과 금리 시장화,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가격 개혁		·전력·석유·천연가스·교통운수·통신 등 가격 개방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혁

20)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혼합소유제 시행을 골간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방향이 설정되었고,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2015. 8. 24 발표)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분류 추진과 혼합소유제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제시함.

21) 「재정·세제 개혁 심화의 총체적 방안(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2015. 6. 30 발표)에서 정부 예산제도 및 세제 개혁 방향을 제시함.

22)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예금금리 상한선이 모두 폐지됨.

23) 18기 3중전회에서 금리 시장화와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선, 다층적 금융시스템, 개방형 금융시스템(위안화 자본 계정항목의 자유태환 실현 가속화) 등을 금융개혁 방향으로 제시.

표 9. 계속

분야		주요 추진 정책
정부기능 전환	행정관리 체제개혁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
	기업 발전환경 개선	·정부의 경영간섭 제한, 행정 심사사항 축소
시장체제 개혁		·통일개방·경쟁적 시장체제 형성, 지역주의와 업종 독점 타파
기타	농업현대화 개혁	·농촌토지제도 개혁, 농촌금융 개혁, 농업보조금 제도
	도시화 관련 개혁	·호구제도 개혁, 거주증제도 시행, 부동산제도 개혁
	대외개방 관련 개혁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전면 시행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 포지티브 방식의 외환관리 ·국내외 투자한도 제한 점진적 취소
	공향발전 개혁	·개인소득세 개혁, 기업의 임금 집체협상 제도 도입 ·입시제도 개혁 ·전민보험 참여, 직공양로보험, 대병 보험제도 전면 실시, 공립의료 종합개혁 추진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실시

자료: 〈건의〉 정리.

마. 대외개방 전략

■ [대외개방의 6대 과제] △ 대외개방 전략 구도 완비 △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 간 협력 심화 △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등을 대외개방 6대 과제로 제시함.

■ [대외개방 신체제] 〈건의〉에서는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서비스 산업 개방, 외환관리 제도 개혁, 위안화의 자유태환과 자유로운 사용 등 대외개방 신체제 구축을 건의함.

- [외국인투자 제도] 13.5 기간 내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²⁴⁾
- [서비스시장 개방]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와 양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방
- [외환관리 제도] 위안화의 자유태환과 인민폐의 SDR 편입을 통한 인민폐의 자유태환·사용 실현

■ [일대일로 건설] 기초 인프라와 국제대통로 건설 추진, 국제경제협력 회랑 공동건설, 에너지협력 강화, 해외산업 클러스터 건설, AIIB·BRICs개발은행 건설 참여, 실크로드기금 구축 등 추진²⁵⁾

24) 18기 3중전회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시행방침을 제기한 이후, 상하이, 푸젠, 광둥, 톈진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이하 「외국투자법」) 초안에도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포함.

25)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고,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유통, 민심상통 등 5대 협력 중점을 발표함.

표 10. 13.5 기간 대외개방 전략 추진 방향

분야	과제	주요 추진 정책
개방전략	대외개방전략 구도 완비	·연해지역의 선진 제조기지, 변경 경제협력구 발전 ·무역강국: 장비 제조업 수출,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 개방 영역 확대, 진입제한 완화 ·해외투자 확대, 해외생산기지 건설, 다국적기업 육성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전자·상거래 등 신형 무역방식 체제 구축, 통관일체화 전면 실시 ·자유무역 실험구 확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점진적 서비스 개방(은행, 보험, 증권, 양로)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 인민폐 SDR 편입 추진, 외환관리의 포지티브 전환, 다국적 기업 자금의 해외운용 제한 개방 ·국내외 투자한도 제한의 점진적 취소
	일대일로 건설 추진	·기초 인프라와 국제대통로 건설 추진, 국제경제협력 회랑 공동건설 ·에너지협력 강화, 해외산업 클러스터 건설 ·AIIB·BRICs개발은행 건설 참여, 실크로드기금, 개방형·원원형 금융협력 플랫폼 도입
	대륙과 HTM 협력 심화	·홍콩의 국제금융·무역·항공 등 3대 중심, 위안화 역외 업무 중추 ·마카오의 세계관광휴양중심, 前海·南沙·橫琴 등 협력 플랫폼 ·(대만) 쌍방향 개방 협력, 해협 양안경제구 건설, 평탄(平潭) 등 대대만 협력 플랫폼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다자무역협상 진전 추동, 글로벌 거버넌스 발언권 확대 ·IMF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촉진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RCEP 및 FTAAP 추진
	국제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기후변화 협상, 2030 지속발전 Agenda 주동적 참가 ·원조 확대, 글로벌 인터넷 안전 유지보호, 국제반부패 협력

자료: 〈건의〉 정리.

바. 공동 부유: 빈민구제, 두자녀정책

■ 〈건의〉에서는 공동 부유의 과제로 농촌 지역의 빈민 완전 해소와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개혁과 함께 기업의 임금 집체협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 [두자녀정책] 1980년 9월부터 약 35년간 유지해온 ‘한자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1가구 2자녀 정책인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늘어 재정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인구정책 전환이 불가피함.²⁶⁾
- 중국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정책을 완화한 ‘단독두자녀정책²⁷⁾’을 도입하였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1,100만 쌍 가운데 신청자는 6%에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함.

26)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16~60세)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2억 1,2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음.

27) 부부 중 한 쌍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각 지방 정부별로 도입된 제도임.

- 두자녀정책 대상은 9,000만 명이며, 향후 2~3년 후에 신생아 수는 현재 매년 1,500만~1,800만에서 2,000만~3,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과학원은 두자녀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약 0.5%p 경제성장 추동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²⁸⁾

표 11.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단계	시기	주요 특징	관련 정책 문건
1단계	1949~1953	출산 장려, 인구성장 촉진	·〈기관부대 여성간부의 낙태제한에 관한 조치〉, 〈출산 억제제한 및 인공유산의 잠정방법〉, 국가 관세청의 피임용 기구 및 약물 수입 금지
2단계	1954~1969	출산억제정책 완화	·〈1956~67년 전국농업발전요강〉
3단계	1970~1979	인구성장억제 산아제한계획 실시	·〈엄격한 산아계획 제창관 관련한 지시〉, 제1회 산아계획 업무 보고회
4단계	1980~2010	산아제한계획 엄격 실시 한자녀(独生子女)정책	·〈인구성장조절에 관해 소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5단계	2013~현재	제한적 두자녀정책 전면적 두자녀정책 실시	·제한적 두자녀정책(单独二孩) 시범 실시(2010. 1. 6) ·18기 3중전회, 한자녀정책 폐지, 제한적 두자녀정책 전면 실시(2013. 11. 15.) ·전면적 두자녀정책 실시 발표(2015.10.29.)

자료: CITIC 증권 연구부 및 〈건의〉 정리.

■ [빈민구제] 〈건의〉에서 농촌 지역의 빈민과 빈곤 현(縣)을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 제시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170만 명의 빈곤인구²⁹⁾를 해소해야 함.

※ 중국 농촌 빈곤인구: 2011년 1억 2,238만 명에서 2013년 이후 중국정부의 빈곤인구 지원정책 추진으로 2013년 말에는 8,249만 명으로, 2014년 말에는 7,017만 명으로 감소함.

3. 평가 및 시사점

-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한·중 간 경쟁과 협력구조 변화,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구도 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른 중국 진출 여건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3.5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을 담고 있으며, 산업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중국제조 2025' 전략, 인터넷 융합 등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한·중 간 제조 분야의 분업구조도 새롭게 형성되어갈 것임.

28) 「社科院：全面二孩预期拉动中国GDP0.5%」, <http://news.21cn.com/caiji/roll1/a/2015/1110/15/30254874.shtml>(검색일: 2015. 11. 12).

29) 빈곤인구 기준선은 2010년 기준 연평균 1인당 소득 2,300위안(2014년 기준 2,800위안) 이하임.

- 제조업 구조조정, 기초 소재의 자급도 제고, 인터넷 융합정책 등을 통해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많은 분야가 중첩되어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 기초 원료, 기초 부품, 기초 소재, 기초 가공기술 등 4대 공업기초 공정 강화추진(2020년까지 핵심 기초 부품, 기초 소재의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로 제고)
 - ※ 양국 신성장동력 산업의 유사성: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의 23개 세부 프로젝트와 한국 신성장동력(3대 분야 17개 산업)의 많은 부분이 중첩됨.
- 그러나 인터넷 인프라(차세대 정보기술), IOT, 로봇,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등 신성장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 선진기술 확보, 공동 R&D, 신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

표 12.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중국제조 2025’ 육성대상 비교

분야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의 관련 육성 업종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 로봇	○	고급 디지털 선반 및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	차세대 정보기술
	실감형 콘텐츠	△	차세대 정보기술(조작시스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 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5G 이동통신	○	차세대 정보기술
공공복자 에너지산업	맞춤형 웰니스케어	○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하이브리드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
	직류 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 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 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	신소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미래창조과학부(2015),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3월).

■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한·중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역발전 추진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지방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

- 일대일로 및 AIIB 관련 협력사업에 공동 참여 가능성 증대: 교통, 전력, 물 공급 등 인프라 건설
 - ※ 진리취(金立群) AIIB 초대 행장 선임자는 AIIB 투자는 2016년 2/4분기 이후 본격화될 것이며, 초기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일대일로 주변국의 수요가 큰 전력, 교통, 물 공급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밝힘.³⁰⁾

- 향후 일대일로 연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갈 것이며, 따라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인프라 및 도시화 관련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임.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및 환경 관련 투자 기회 증대

■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과 함께 신성장 산업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아가야 함.

- <건의>에서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고 있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 부여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한·중 FTA 투자와 서비스 협상 타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한·중 FTA의 지방간 협력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FTA 협력 시범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의>에서 향후 중국은 RCEP과 FTAAP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TPP 타결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함.

■ 2020년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중등소득 국가에 진입하게 되고, 특히 13.5 기간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빠르게 전환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임.

- 소강사회가 실현되는 2020년 1인당 GNI가 12,822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은행의 중등소득 국가 기준(12,746달러)을 상회하게 될 것임.
- 특히 중산층의 확산과 80후(后)와 90후(后) 등 신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소비시장 역시 재편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것임.

■ 13.5 기간에는 신성장동력 산업, 신형 도시화 및 도시 인프라 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두자녀정책 시행, 식품 안전 강화, 환경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도 커질 것임.

- 인터넷 인프라 건설과 ‘중국 제조 2025’ 추진에 따른 신성장 분야의 중국 진출기회 확대
 - 인터넷 인프라 건설, 차세대 인터넷 기술, 인터넷 금융, 인터넷 오락, 인터넷 교육, 인터넷 의료 등 인터넷 인프라 건설과 인터넷+행동계획 실행에 따른 진출기회 활용
 - IOT, 3D 인쇄, 로봇 등 ‘중국제조 2025’ 추진에 따른 한·중 간 협력 기회 확대
- 스마트 시티, 스폰지 도시, 도시지역 지하망 건설, 환경 설비, 오수 처리, 충전소 등 신형 도시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에 따른 진출기회 활용
-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양로 서비스³¹⁾ 상업보험 등 서비스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에 따른 진출기회 활용

30) 『环球网』(2015. 11. 12), 「金立群：亚投行融资将集中在电力等三领域」.

31) 중국의 노령화 관련 시장은 2014년 4조 위안 규모에서 2020년에는 11.5조 위안(도시 노인소비 9.5조 위안, 농촌 노인소비

- 영유아 용품, 분유, 아동 의약, 만화 및 동영상, 완구, 아동의류, 조기교육 등 두자녀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진출기회 활용
- 건강식품, 녹색식품, 환경 설비 등 식품안전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활용

표 13. 13.5 기간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성장 예상 분야

개념	관련 정책(건의)	성장 예상 분야
두자녀정책	두자녀정책, 인구 노령화	영유아용품, 분유, 아동 의약, 만화 동영상, 완구, 아동의류, 신생아 의료시설, 조기교육
아름다운 중국	녹색발전, 자원절약·환경우호형 발전	스폰지 도시, 환경보호 설비, 탄소배출권 거래, 오염처리 시설, 충전소 등
건강중국	건강중국, 의약 위생 개혁, 식품안전 전략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양로산업 / 건강 식품, 녹색식품
인터넷+	인터넷 강국, '인터넷+'행동계획, 국가 빅데이터 전략	인터넷 금융, 인터넷 오락, 인터넷 교육, 인터넷 의료 등
중국제조 2025	제조 강국, 중국제조 2025, 전략성 산업	IOT, 3D 인쇄, 로봇
중고속 성장	소비중심 성장, 서비스업 중심 성장 및 개방	금융, 관광, 양로서비스 등
문화매체	문화혁신 추진	문화, 전통매체, 신형매체, 영화/TV, 삼망융합 등
개혁심화	전면 심화 개혁, 심화 개혁 견지	상업성 국유기업 지분 인수(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공항, 통신 등)
일대일로	장비 글로벌 협력, AIIB, 실크로드기금	철도, 항만, 전력(원자력발전), 물 공급 등
구역 균형발전	4+3 지역발전, 중형 경제특대 형성, 중점 경제구, 자유무역구 전략	징진지, 자유무역구, 창장경제벨트, 일대일로 연선 중서부·동북지역

자료: 21세기경제보도(2015. 10. 30.)를 기초로 재정리.

■ 중국의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나, 중국 진출기업의 환경관련 비용, 인건비, 에너지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 할 것임.

-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외환관리제도 개선 및 자본 항목의 자유화 실현 등 전반적으로 중국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임.
- 그러나 환경 및 토지 규제 강화, 임금 단체협상 도입, 자원가격 개혁 등으로 관련비용 상승이 불가피함.
- <건의>에서는 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경지 관리, 건설용지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중국진출 기업의 관련비용 상승이 불가피함.³²⁾
- 사회보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임금 단체협상 제도의 시행 등으로 기업의 임금상승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3.5 기간 동안 중국은 에너지(전력·석유·천연가스), 교통운수, 통신 분야의 가격에 대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상승도 예상됨. KIEP

2.0조 위안, GDP의 13.6%에 달할 전망)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CITC 증권 전망).

32) <건의>에서는 13.5 기간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 제도 실행,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 실행, 가장 엄격한 용지절약 제도 견지,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 제도 견지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관리를 시행할 것임을 밝힘.

【부표】 13.5 기간 분야별 과제와 주요 추진 정책

이념	과제	주요 추진 정책
혁신 발전 (7개)	① 발전의 신동력 육성	·[혁신·창업] 대중 창업·만중창신, 신수요·신공급 창조, 신기술·신산업·신업태 발전 ·[소비주도 성장] 소비의 성장에 대한 기초 작용, 스마트·녹색·건강·안전 소비, 유통 정보화·표준화·집약화 ·투자의 성장에 대한 관건 작용, 투융자체제 개혁, PPP 확대 ·수출의 성장에 대한 촉진 작용, 우위수입·우위수출 전략
	② 발전 신공간 개척	·[구역발전 공간 개척] 지역발전 총체전략을 기초로 함. ·[중형 경제축대 형성] '일대일로' 건설·장진지 협동발전·창장경제벨트 건설을 통해 연해·연강·연선 위주의 중형 경제축벨트(軸帶) 형성 ·[중점경제구] 중점 지구의 일체화 발전, 일부 중점경제구 적극 육성 ·[도시군] 도시군의 방사 복사작용 발휘, 장진지·장삼각·주삼각 등 3대 도시군의 특화 발전, 동북지구·중원지구·창장중류·성위(성도-중경) 지구 관중평원 등 도시군 형성 ·[중심도시] 일련의 중심 도시 발전, 구역 서비스 기능 강화 ·[3화 도시화] 녹색도시·스마트도시·산림(山林)도시 건설, 도시간 기초 인프라 상호연계 ·[도농일체화 발전] 도농 일체화 발전 추진, 농촌의 광활한 발전공간 개척 ·[산업발전 공간 개척]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신에너지 등 신중산업 발전 및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신형 인큐베이터 방식 보급, 엔젤투자·창업·산업투자 발전, 창업반·신산업 개혁 심화 ·[인터넷 강국 전략 실시] 고속이동·안전·광대역 차세대 정보 기초시설 건설 ·[기초 인프라 건설] 수리·철로·도로·수운·민항·항공·파이프라인·우편 기초시설 네트워크 완비 ·[도시 인프라 건설] 도시 공공교통·홍수방자·범람방지 시설 건설, 도시 지하관 망 개조 프로젝트 실시 ·전력·교통·석유·천연가스·시정 공용 등 자연독점 업종의 경쟁성 업무 개방 확대 ·[인터넷 경제] '인터넷+' 행동계획, IOT 기술 응용, 분형(分享, 인터넷+N) 경제 발전, 인터넷과 경제사회 융합 발전 ·국가 빅데이터 전략, 국가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 ·통신보급 메커니즘, 네트워크 속도 제고비용 절감, 차세대 인터넷 보급 ·산업조작비즈니스 모델·가치사슬·물류체인 혁신 등 인터넷 혁신 기반 조성 ·[해양경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 생태환경 보호, 해양권의 유지, 해양강국 건설
	③ 혁신 추동전략의 심화 실시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 실시, 국가실험실 구축, 국제 대과학 계획과 대과학 공정 ·과학기술체제 개혁
	④ 농업현대화의 전력 추진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고효율·상품안전·자원절약 친환경 농업현대화 ·농촌토지제도 개혁, 농촌금융 개혁,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 ·농업보조금 완비,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혁 ·신형 직업농민 육성
	⑤ 신산업 체계 구축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건설과 중국제조 2025 실시 ·제조업의 분업 세분화 유도, 정보기술의 시장설계생산 분야 적용, 생산방식의 소프트화·스마트화·정밀화 ·[공업 기초 강화 공정] 품질브랜드 제고 행동 전개, 국제표준에 맞춘 업종 표준기술 개조, 상품의 기술제조장바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 수준 제고 ·[전략성 신중산업 발전] 산업촉진정책과 경쟁 촉진기능 발휘, 국가산업 투자의 자금유도 기능 발휘, 일련의 전략성산업 육성 ※ 기존의 7대 전략성 신중산업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2020년 전략성 신중산업의 GDP 대비 비중 목표는 20%) ·[공급과잉 해소] 시장 메커니즘·경제수단의 법수단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 ·기업퇴출 메커니즘 완비 ·[스마트 제조공정] 스마트 제조공정을 통한 새로운 제조체계 구축 ·[10대 산업 육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첨단 NC·선반 및 로봇, 우주항공설비, 해양플랜트 및 고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신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발전 추진 ·[현대서비스업 발전] 시장진입 개방 ·제조서비스 전문화, 생활서비스 정교화, 제조업의 생산형 서비스업 전환 ·관광업 대대적 발전 ·독점성 공공 서비스업(전력,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시정 공용 등)의 경쟁성 부문 개방 가속화

⑥ 발전 신체제 구축		·[행정관리 체제 개혁]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 정부기능 전환 진일보 진전, 권한이양 추진, 시장활력과 사회 혁신능력 발휘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 발전] 공유제를 주제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 발전 견지 ·공유제 경제 기반 공고화 및 발전, 비공유경제의 발전 장려 ·재산권 보호 법치화 추진, 각종 소유제 경제의 권익 보호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의 경제활력·통제력·영향력·리스크 통제능력 강화 ·국유기업 개혁의 분류 추진, 현대 기업제도 완비 ·[국유자산 관리] 국유자산관리체제 완비, 자본관리 위주의 국유자산 관라감독 강화, 국유자산 유실 방지 ·국유자본의 합리적 유동 메커니즘, 국가안전·국민경제의 명맥 결정 분야에 집중
		·[민영기업 진입영역 확대] 민영기업 진입영역 확대,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확대, 비공유제의 활력과 혁신력 발휘
		·[기업 발전환경 개선] 정부의 경영간섭 제한, 행정 심사 사항 축소 ·기업에 대한 행정 경비 규범화, 재산권·혁신이익 보호
		·[시장체제 개혁] 통일개방·경쟁적 시장체제 형성, 지역주의와 업종 독점 타파, 요소배분 개혁
		·[재정·세제 개혁] 공평한 현대 재정제도 및 고효율 세수제도 구축 ·사업권과 지출책임 연동, 적절한 중앙의 사업권과 지출책임 강화 ·중앙과 지방 세수의 분배 조정 ·공개 투명한 예산제도 확립, 정부예산 체제 완비 ·규범화된 지방정부의 기재 및 용자체제 건립 ·혁신 상품과 녹색 상품 우선 구매 및 정부조달정책 실시
		·[금융체제개혁] 금융의 실물경제 서비스 효율 제고 ·[금융기구 개혁] 상업성 금융·개발성 금융·정책성 금융·합작성 금융의 분업 합리화 및 상호 보완적 금융 시스템 구축 ·다층적이고도 차별화된 은행기구 체제 구축,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입 확대, 특혜금융(普惠金融) 발전, 중소기업·농촌 빈곤지역 지원 금융서비스 강화에 역점 ·[직접금융 육성] 공개투명·건강한 자본시장 발전, 주식과 채권 발행·거래 제도 개혁 추진, 직접금융 비중 제고, 부채율 감축 ·혁신 수요에 부합한 금융서비스 개발, 고수익 채권 및 주식의 상호 결합을 통한 용자방식 추진 ·[환율과 금리 시장화] 금융기구의 관리 및 서비스 질 제고,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저감 ·인터넷 금융 발전 규범화 ·대재난보험제도 건립 가속화, 보험자산 거래 메커니즘 건립 탐색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국유자본과 외환준비 관리 제도 정비,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금융 기초인프라 및 금융 리스크 관리 수단 마련
		·[기본 방향] 총량 조절과 특정목적 조치 병행·단기와 중장기 결합·국내외와 해외 통합·개혁과 발전의 협조 요구, 6대(취업 확대, 물가 안정, 구조조정, 효율 제고, 리스크 방지, 환경보호) 분야에 역점 ·[거시조정] 안정정책 기조 아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수단 혁신, 구간 내 조정 기조 아래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定向) 조정력 강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위주로 하고 산업정책·구역정책·투자정책·소비정책·가격정책의 결합, 재정과 통화정책의 협조 강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 경제 운영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 제고 ·[가격개혁: 정부의 가격 관여 축소] 경쟁성 영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전면 개방, 전력·석유·천연가스·교통운수·통신 등 경쟁성 조절가격 개방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식별 및 경보 메커니즘 구축, 재정·금융·에너지·관산자원·수자원·식량·생태·환경·안전·생산·인터넷 안전 분야의 리스크 관리능력 중점 제고
균형 발전 (4개)	① 지역 균형 발전	·4대 판塊 + 곤란지역 지원 ·[동부 출현발전] 동부지역의 출현발전을 지지하여 기타 지역으로의 확산 기능을 강화함. ·[서부대개발]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서부지역에서는 기초인프라 건설, 비교우위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강화에 역점 ·[중부굴기] 정부의 지지를 강화, 시장지향형 개혁 ·[동북 등 노공업기지 진흥] 정부 지원 강화, 시장지향형 개혁 ·[곤란지역 지원] 자원고갈·산업쇠퇴·생태악화 등으로 곤란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혁명노구·민족지구·변경지구·빈곤지구 발전 지지
		·[성장극] 약간의 성장극을 육성하여 주변지역과 협조발전의 성장극(極) 육성 ·[진진지 협동발전] 도시 공간 분포·산업구조 고도화, 점진적으로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 해소, 교통 일체화, 환경 용량과 생태공간 확대, 인구 과밀지구의 특화개발 방식 모색 ·[창장경제벨트 건설] 창장유역 생태환경 개선, 종합적인 입체 교통회랑 건설, 산업 분포 고도화 및 분업협력 유도

	② 도시·농촌 균형 발전	·특색 있는 현(縣)경제 발전, 중소도시와 특색 있는 농촌도시(小城鎮) 육성 ·농산물 심화가공 및 농촌서비스업 발전 촉진, 농민소득 증대원 개척, 농민소득 증대지 정책 완비, 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증강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추진, 도시 구획·건설·관리 수준 제고 ·[호구제도 개혁 심화] 도시지역 농업이전 인구의 안정적 취업과 생활 추진, 도시민과의 동등한 권리의무 시행 ·재정이전지불 제도와 농업이전 인구 시민화 연계 메커니즘 건립, 도시 건설용지 증가 규모와 농업이전 인구 이전 수량 연계 메커니즘 건립 ·[거주증제도 시행]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 완전 복개 실현 노력 ·도시이전 농민의 토지청부관·택사용관·집체수의 분배권 보호 및 유상양도 지지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도시 판자촌과 농촌 위험주택 개조역량 강화
		·도시와 농촌의 공공자원 균형 배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수준 제고, 농촌 주민의 환경정화 행동 전개, 농촌 주민의 역사 및 문화 유적 보호력 강화,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국가의식·법치의식·사회책임의식 함양, 중화 전통 미덕 선양 ·문화인재 배양, 문화체제 개혁 심화, 골간 문화기업과 창의문화산업 발전,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 ·[문화산업체계 구축] 문화산업의 구조 고도화, 신형 문화 업태 육성, 문화소비 유도 및 확대 ·전통매체·신매체 융합 발전, 중화문화 해외진출 추동
녹색 발전 (6개)	④ 경제·국방 융합 발전	·발전과 안전의 고려·부국과 강군 통일 견지, 전(全) 요소·다영역·고효율의 군민 융합발전 국면 형성 ·2020년 국방개혁 목표 완성, 군민 융합발전 전략 실시 ·군민융합발전 입법화, 군민 융합발전 시범구 조성
	① 사람·자연의 화해공생 촉진	·과학적·합리적 도시화 구도·농업발전 구도·생태안전 구도·자연해안선 구도 구축 ·규범화된 국가생태문명 실험구 설립 ·[녹색·청결 생산] 전통 제조업의 녹색화 개조 추진, 녹색저탄소순환 발전 산업체계 구축, 기업의 생산설비 갱신개조 지원 ·녹색금융 발전, 녹색발전기금 설립
	② 주체 기능구 건설 가속화	·주체 기능구의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기초 제도적 작용 발휘 ·전국 주체 기능구 구획도 제정·농업산물 주산구·중점 생태공농구 목록 발표
	③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에너지 혁명] 에너지 기술 혁신, 청결저탄소안전고효율 현대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비화석화] 비화석 에너지 비중 제고, 화석에너지(석탄 등) 청정고효율 이용 ·[신에너지] 풍력·태양에너지·바이오 에너지·수력·지열 에너지 발전, 원자력 고효율안전 생산 ·[전력망]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 그리드 건설 강화, 절약저탄소 전력 통제 ·점진적 개발권 개방, 천연가스·석탄가스·세일가스 적극 개발 ·에너지 체제 개혁, 유효한 경쟁적 시장메커니즘 형성 ·[저탄소운송] 교통운송의 저탄소 발전 추진, 공공교통 우선 실행, 궤도교통 건설 강화, 자전거 등 녹색 행동 장려 ·신에너지 자동차 확대 계획 실시, 전기차 산업화 수준 제고 ·건축 분야 절약 표준 제고, 녹색 건축과 건자재 확산 ·[탄소배출권 통제 강화] 에너지 고소비 업종 사용통제 강화, 중점업종(전력, 철강, 전자제, 화공 등)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통제, 탄소배출 최고목표 숙신 실현, Near-0탄 탄소 배출구 시범 프로젝트 실시 ·[순환발전 선도계획 실시] 기업의 순환식 생산, 산업의 순환식 조합, 산업단지의 순환식 개조 추진, 단위산출당 물질 사용 감소 ·[순환 소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회수재생 강화, 생산 시스템생활 시스템의 순환 연결
	④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절약 우선, 절약 집약순환 이용의 자원관 수립 ·[약속성 지표관리 강화] 수자원과 수자원 소모건설용지의 총량과 강도 통제 행동 실시 ·[전민 에너지 절약 행동 계획 실시] 에너지 절약절수토지절약재료 절약광물 절약 표준 제고, 에너지 효율물효율 선두주자 행동 전개 ·[수자원 관리]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실행, 물 절약사회 건설, 합리적 물 가격 제정, 절수계획 편제, 우수자원재생수 이용·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실시, 국가 지하수 측량 시스템 구축 ·[토지 절약] 엄격한 용지절약제도 견지, 건설용지 구조 조정, 공업용지 비율 감축, 도시 저효율 용지의 재개발과 폐광 지역의 복구, 농촌 집체 건설용지 규모의 엄격 통제 ·경지 윤작휴작제도 시험 탐색 ·에너지관·용수관·오염배출권·탄소배출권 분배제도 구축, 유상사용·예산관리·투용자 메커니즘 혁신, 거래시장 육성 ·계약 자원관리와 계약 절수관리 추진 ·[근검절약의 사회풍토 조성] 합리적 소비, 사치소비 및 풍조 억제, 생산유통보관소비 단계의 절약, 반(反)과대포장반(反)식품낭비반(反)과도소비 행동 전개

개방 전략 (6개)	⑤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엄격한 환경보호제도 실행, 대기·물·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실행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독·감찰 집행 수직관리
	⑥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보호우선·자연회복 위주 원칙 견지 ·대규모 국토녹화 사업 실시, 천연림 보호제도 ·물 생태보호 강화 ·사막화 관리 강화 ·블루해양항만 정리 행동 완비
	① 대외개방 전략 구도 완비	·[기본방향] 쌍방향 개방 추진, 국내·국제 요소의 점진적 유동, 자원 효율적 배분·시장 심도 융합 ·[개방지역] 내륙의 국경지역 해관과 기초 인프라 건설, 국경간 교통운송 회랑 건설, 외향형 산업클러스터 육성, 각종 중점 대외개방기지 건설,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영향력을 갖춘 선진 제조기지·경제구 육성, 변경·국경간 경제협력구 발전수준 제고 ·[무역강국 진입] 전통적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점유율 공고화, 장비 제조업의 수출주도 산업 육성, 서비스무역 발전, 적극적 수입정책 추진 및 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개방영역 확대, 진입제한 완화, 효율적인 해외자금과 선진기술 유입 ·[해외투자]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장비·기술 표준 서비스 해외진출, 글로벌 산업체인·밸류체인·물류체인 편입, 일련의 물자 해외생산기지 건설, 일부 다국적기업 육성,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금융서비스 플랫폼 적극 구축
	② 대외개방 신체계 형성	·[기본 방향] 법치화·국제화·편리화, 호혜공영의 국제무역·투자규칙 체계 완비 ·[신무역] 전자상거래 등 신형 무역방식 체계 구축, 건전한 서비스 무역 촉진체계 구축, 단일창구와 통관일체화 전면 실시 ·자유무역 실험구의 질 제고 및 실험지구의 확대 ·[개방체계]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내외자 기업의 동일시·공평경쟁 ·해외투자 관리 완비, 해외투자 촉진정책과 서비스체계 구축 ·점진적 서비스 개방(은행, 보험, 증권, 양로), 금융업 쌍방향 개방 ·[외환관리 자유화]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 인민폐 SDR 편입 추진, 자유태환·자유사용 화폐 실현 ·외환관리 방식과 사용방법 전환: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 ·해외투자 환전 제한을 개방하고, 기업·개인 외환관리 요구 개방, 다국적 기업 자금의 해외운용 제한 개방 ·국제수지 관리감독 강화,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 유지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 국내외 투자한도 제한(QFII, QDII)의 점진적 취소
	③ 일대일로 건설 추진	·[원칙] 공상·공진·공향 원칙 견지, 양자 및 다자 협력 메커니즘 완비, 기업 위주의 시장화 운영 실행,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윈-윈 실무 협력 추진, 대륙과 바다의 연동, 동서 쌍방향 개방의 전면 개방의 신국면 건설 ·기초 인프라와 국제대통로 건설 추진, 국제경제협력 회랑 공동 건설 ·에너지 협력 강화, 현지 가공을 제고 ·해외산업 클러스터 공동 건설, 현지 산업체계 추동, 광범위한 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환경보호 분야 협력 전개, 현지 대중의 행복 조성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AIIB·BRICs 개발은행 건설 참여, 실크로드 기금의 기능 발휘, 국제자금과의 개방형·원인형 금융협력 플랫폼 도입
	④ 대륙과 HTM 협력 심화	·[원칙] 일국양제, 고도차치 방침, 홍콩과 마카오의 대외개방 지위와 기능 강화 ·[홍콩] 국제금융·무역·항운 등 3대 중심지위 지지, 홍콩의 위안화 역의 업무 중추 지위 강화, 용자·비즈니스·물류·전문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발전 ·마카오의 세계관광휴양 중심·중국-포르투갈 언어 국가간 경제무역 협력 서비스 플랫폼 지위 ·첸하이-난사-형진(前海·南沙·橫琴) 등 마카오-홍콩 협력 플랫폼 구축 ·사회·민생·과학기술·문화·교육·환경보호 분야의 내지·홍콩·마카오 협력과 교류 확대 ·범 주강삼각주 협력 심화 ·[대만]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양안 일가족(兩岸一家親) 견지, 상호공영의 양안경제협력 심화 ·양안 산업협력 발전·금융산업 및 무역투자 등 쌍방향 개방 협력 추동 ·해협양안경제구 건설 추진, 평탄(平潭) 등 대대만 협력 플랫폼 추동 ·양안간 인적교류 확대, 농업·문화·교육·과학기술·사회 등 영역 교류 협력 심화, 양안 동포 복지 증진, 대만 보통 민중·청소년·중소기업의 혜택 향유
	⑤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국제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완비, 글로벌 경제 어젠다의 적극 유도, 국제경제질서의 평등·공평·협력 공영의 발전 방향 추구 ·거시경제정책 국제협조 강화, 글로벌 경제 균형·금융안전·경제 안정성장 촉진 ·인터넷·심해·극지·우주 등 신영역의 국제 규칙 제정 적극 참여 ·다자무역협상 진전 추동, 균형·원만·포용발전 촉진, 공정·합리·투명한 국제무역 규칙 체계 형성 ·국제경제 거버넌스에의 평등 참여 지지, IMF 및 국제금융 관리·감독 개혁 촉진 ·FTA 전략 가속화, 전면적인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RCEP 및 FTAAP 추진

	⑥ 국제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기후변화 협상, 배출감축 약속 이행 ·대외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방식 완비, 개도국을 위한 인력자원·발전규화·경제정책 등 방면의 자문 및 훈련 제공 확대, 과학기술 교육·의료위생·재난방지·환경관리·야생동물 보호·빈곤탈피 등 대외협력과 원조 확대, 인도주의 원조역량 강화 ·2030 지속발전 Agenda 주동 참가 ·국제 공공안전 유지, 테러리즘 반대, UN 평화유지 활동 적극지지, 확산방지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민감문제 참여, 국제 통로 안전 공동 유지 ·글로벌 인터넷 안전 유지보호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 ·국제 반부패 협력 추동
공향 발전 (8개)	①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	·보편적 혜택·기본 보장·균등화·지속 가능방향 견지 ·의무교육·취업 서비스·사회보장·기본 양로 및 공공위생·공공문화·환경보호 등 기본 공공서비스 강화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사회자본의 공공서비스 참여
	② 빈곤탈피 공정 실시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탈피는 전면 샤오강 사회 실현의 최대 임무 ·빈곤탈피 책임제 실행: 중앙 통합성(자치구, 직할시) 책임·현 실시 업무 추진체제 ·빈곤탈피 책임 고과평가 강화, 빈곤 현에 대한 중점 고과 실시 ·중앙과 성 정부 재정 빈곤층 지원 확대, 정책성 금융과 상업성 금융의 상호작용 발휘, 빈곤 지원자금 원 개척
	③ 교육의 질 제고	·의무교육 균형 발전 ·취학 전 교육 발전, 특혜성 유아원 발전 장려 ·교육 공평 촉진, 빈곤계층 교육 지원 ·입시제도 개혁 심화 ·교육 정보화, 원거리 교육 발전
	④ 취업·창업 촉진	·취업우선 전략, 적극적 취업정책, 창업지원, 구조적 취업 모순 집중 타개 ·통합 인력자원 시장 육성 ·고교 졸업생 취업 및 창업 유도 계획, 청년 취업 및 창업 ·평생 직업기술 훈련제도 추진 ·취업통계 시스템 구축
	⑤ 소득격차 축소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동시 실현,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 제고 동시 추구, 최저임금제도 개선 ·1차 분배 규범화, 재분배 조절력 확대 ·기업 임금단체협상 제도 추진, 최저임금 조정 메커니즘 정비, 임금제도 정비 ·중등 소득자 비중 확대 ·종합과 분류 상호 결합형 개인소득세제 건립 ·재산성 소득의 증가 루트 확대, 불법소득 억제 ·자산사업 발전, 사회 환원·빈곤지원에 대한 세수정책 정비
	⑥ 공평·지속가능 사회보장제도 건립	·전민 보험 참여 계획 실시, 법정 인원의 전면 보급률 실현 ·정부·기업·개인의 책임 분담 ·사회보장보험률의 적정 인하 ·직공양로보험 개인구좌 제도 완비 ·국유자본 수익의 공공재정 상납비율 제고, 국유자본의 사회보장기금 충당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직업연금·기업연금·상업 양로보험 발전 ·(도시, 농촌) 큰 질병에 대한 보험제도 전면 실시 ·상업 건강보험 발전 장려
	⑦ 건강중국 (健康中國) 건설	·[의료제도 개혁] 공립의료 종합 개혁, 원거리 의료 발전 ·민족 의약(중의약) 발전 ·식품안전 전략 실시
	⑧ 인구 균형발전 촉진	·인구발전 전략의 완비, '두자녀정책' 전면 실시 ·인구노령화 대응 행동 전개, 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 결합, 장기보호보험제도 탐색 ·양로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남녀평등의 기본 국책, 부녀 및 미성년 인권 보장, 장애인 지원사업 발전

자료: 〈건의〉 정리.